

코오롱, 희망퇴직 이어 강제퇴직?

구미·경산·김천 2000여명 대상 ... 노조는 경영악화 책임전가 반발

코오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코오롱이 희망퇴직 접수에 이어 2차 인력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코오롱에 따르면, 12월3일부터 7일까지 연봉제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데 이어 비연봉제 사원에 대해서도 12월10일경부터 인력 조정방안에 대해 노조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의 희망퇴직 접수방침에 대해 경영악화의 책임을 직원에 전가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어 2차 인력조정 계획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차 인력조정의 대상은 구미공장 노조원 1470명과 경산과 김천공장의 공제회 회원(비노조원) 600여명을 포함할 예정이어서 300여명의 연봉제 사원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퇴직자 접수 때보다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때문에 대규모 감원을 우려하고 있는 노조는 일단 회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12월 10일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최근의 회사경영이 어려워진 것은 경영진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다음주에 기자회견 등을 열어 경영진의 무능함을 집중 성토했을 예정이어서 인력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오롱 노조는 12월7일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과 공동으로 작성한 성명서에서 회사가 경영악화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해 인원 감원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회사는 11월 임원인사에서 최근의 경영악화에 대해 책임을 진 경영진이 없어 희망퇴직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회사의 책임 전가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4/12/09>